

2008년도 (사)한국정부회계학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동계세미나
“한국정부의 재정회계지표”에 관한 학술세미나

○ 배득중(개회사, 한국정부회계학회장)

-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이자 연세대학교 교수인 배득중입니다. 오늘 날씨도 조금 쾌청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1998년부터 행안부와 복식부기제도도입을 위해 공동협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모든 자치단체가 복식부기 제도를 도입 이처럼 많은 분들이 하나의 제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인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각 개별 지방정부별로 각자 알아서 하고, 국가 전체적인 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복식부기 팀에서 하는 노고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춘계세미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식부기 담당하시는 공무원 분들을 많이 모셔가지고 애로점이나 개선해야할 것들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행정안정부에서도 준비를 했지만, 그동안의 구축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회계지표도 만들고, 활용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 설문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야 하는가에 관한 설문조사입니다. 활용사례를 잘 적어주시는 분들에게는 특별상을 준비했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분들에게 시상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일 좋은 시간 가지시고, 특히 오늘 저희가 모인 것을 축하해주시기 위해 자리해주신 소중한 두 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제주대학교 총장이신 고충석 총장님과 제주도의 박영부 국장님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틀간 즐거운 시간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고충석(환영사, 국립제주대 총장)

- 제주대학교의 고충석입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한라산과 점점 짙어가는 바다가

함께 어우러지는 제주에서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원분들과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중앙, 지방 정부의 재정통일성과 재정효율성 정책이 회계시스템 개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정부회계학회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기준 복식부기 회계제도, 사업 예산제도는 지자체 회계제도의 대변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분화되어가는 다른 학회와는 달리, 회계학, 정치학, 행정학, 경제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이해를 넓히면서, 정부회계의 개혁을 주도해온 그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매우 놀라운 발전을 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와는 달리 특별한 행정제도를 가진 제주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예산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 성과측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방면에 꾸준한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표에 관한 세미나가 미래 예산회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업무와 연구 활동 및 일상에서 잠시 제주바람에 접어두시고, 재충전을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제주에서 좋은 추억을 남겨 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동계세미나를 제주에서 개최하도록 애쓰신 한국정부회계학회 배득중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평화의 섬 제주에서 유익하고 즐거운 세미나가 되시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영부(기념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

-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자연유산의 아름다운 섬, 정부가 발표한 평화의 섬 제주특별자치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복식부기 정착과 발전을 위해 마련한 복식부기 담당 공무원의 워크숍이 제주에서 열린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귀한 행사를 주최해주신 이 자리에 오시진 못하셨지만, 행정안전부 이삼걸 지방세재국장님과 관계자분들의 깊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국정부회계학회를 이끌고 계신 배득중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따뜻한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오늘의 워크숍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제주대학교 고충석 총장님께도 특별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된 지 올해로 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복식부기가 실행되면서,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는 등 재정분야에서 변화와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정의 투명성은 행정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금융위기의 요인으로 불투명한 회계가 진행되고 있던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에서도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복식부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오랜 시간동안 단식부기 행정주의 회계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도입초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공직자들이 복식부기 제도의 합리성과 과학성을 실감하고 있으며, 한발 더 나아가 이 제도의 정착과 발전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제주에서 열리는 워크숍이 복식부기 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리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모든 제주에오신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관광을 하실 텐데 아까 총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제주의 바람은 공짜입니다. 특히 제주의 물은 예비양보다 더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100% 출자해서 만든 물이고, 수익금 일체는 도를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다수를 많이 드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효(진행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오후 2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 이효(진행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자리 정리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본 세미나의 주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적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지표에 대한 것입니다. 전체사회는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심재영교수님께서 맡아서 해주시겠습니다.

○ 심재영(사회자, 한국방송통신대)

-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대학의 심재영교수입니다. 오늘 주제는 한국지방정부의 재정회계지표 개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제도를 통해 정보를 생산해내는데 치중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 정보의 활용에 대해 연구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3 분야로 나누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지표, 중앙정부의 재무회계지표, 그리고 이들 간의 불일치에 대해 발표가 있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송상훈 사무관님, 이효 박사님, 김헌회계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주제에 대해 20분 정도 발표를 갖겠습니다. 그럼 먼저 송상훈 사무관님께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적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분석지표에 대해 발표해주시겠습니다.

○ 송상훈(발표자, 행정안전부 복식부기담당 사무관)

-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안전부 복식부기 담당 송상훈입니다. 올해 저희들 기념비적인 한 해입니다. 물론 갈 길은 아직 멀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가도 이제 내년에 시행해야하고, 저희도 아직 보완해야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첫해를 의미있게 시작한 것 같고, 내년이 되면 지방재정관리 시스템으로 결산을 봐야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들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자료변환이라든지,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셨고요, 재무보고서가 의미있게 나온 것에 대해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제 재정정보 인프라는 구축되었고, 이제 발표를 할 정보의 활용을 위한 분석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올해 5월에 개발완료를 하였다가 기존의 가지고 있던 것을 시뮬레이션 하고, 그 결과 현재 10월에 발표한 내용은 29개 3개 분야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아직 개발 중인 지표입니다. 내년부터 추가적으로 개발을 해서 확정될 때까지, 물론 이제 저희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관점에서 지표를 만들다 보니까 지자체들 특성을 반영하기에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원가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책임성이나 생산성 이런 부분의 지표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올해 말부터 내년 초에 걸쳐 재무보고서 표준모델을 개발을

합니다. 작년에 있던 것 개발을 할 때 현재 이 지표가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만의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예산회계부분은 저희들 재정회계지표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30개 재정회계분석지표가 있다가 올해 이제 많이 줄어들어서 재무분석지표가 이제 개발을 해서 언론에 공표를 할 상태입니다. 그래서 3개 분야 29개 지표가 있습니다. 재정운영, 회계 책임성에 대한 지표를 공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자치단체 심도있는 분석이 아직까지 쉬운 단계는 아니지만, 첫 재무회계지표에 따른 정보라는 의미를 두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활용을 해나갈 것이고, 또 몇 년 쌓이면 증감율이라든지, 구성비율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2007년 결산분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시면, 물론 이제 총자산 총부채 비율을 보시면은 사실 기업회계와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총부채비율이 전국적으로 3.6%입니다. 그리고 재정구조가 지방교부세라는 큰 재정조정제도가 있기 때문에 부채기준이 절대적으로 어느 정도가 아직 개발하는 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단순히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전국평균이 3.6%, 아무래도 도 단위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부채의 성격에 대한 지표가 개발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부채개념도 넣고, 차입부채 비율을 넣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을 도입을 했을 때 가장 논란되었던 것은 정부회계에 있어서 기업하고는 달리 수익구조, 경영구조를 가진 것을 아니지만은 재정위기가 도래했을 때, 사회기반시설을 되팔 수 있느냐, 일단 사회기반시설을 유예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위기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내자는 취지에서 기초단계이긴 하지만 현금창출자산을 그리고 부채대비 자산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부채 워낙 작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긴 하지만, 다만 이제 이 비율이 100%가 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당장에 현금창출자산을 되팔아도 안 되는 곳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재정운영관련 지표를 보시면은 저희는 예산회계대비 지출 비율, 흔히들 지출계획성을 많이들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확장을 해줘야 지출계획이 확정이 되고, 출납회계기한이 있기 때문에,

지출계획성 합리화, 특히 요즘 국회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불용의 처리문제입니다. 언론에도 이 부분이 많이 나오고, 중기재정계획을 어떻게 내실화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군의 경우 시설투자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많은 관계로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도같은 경우는 전후간 이월비율이 있기 때문에 계획성이 높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익, 이자비율의 경우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정부자금 지원이 좀 많은 특별시, 광역시가 좀 이자율이 높습니다. 4% 내외의 정부자금 이자율을 쓰고 있고, 도 단위는 지역개발 채권료 이자율이 2.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체수달 수익대비 채권비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정세를 단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있는 대신에 세외수입은 각 개인별로 업무별로 직접 한다던지 하는 형태로 분담되어 있습니다. 올해 특히 또 질서유지법이 발효가 되지 전까지는 가산금체제도 잡혀있지 않아서 떨어질 것입니다. 특히 자치구 보시면은 세외수입은 지방세 비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지방세가 올해 초에 한 34조~43조 작년 올해 비교해보면 그렇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세외수입도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32조 정도 되는데, 반면에 지방세 회수율 같은 경우는 80%가 넘어갑니다. 근데 채권비율은 회수율의 0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치구 같은 경우는 80% 이상 채권을 가지고 있다 회수율 20% 정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성과지표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회계책임관련 지표입니다. 책임성 분야가 가장 취약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총자산 같은 경우가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군단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이제 주민 1인당 총비용같은 것을 보시면 가장 높습니다. 물론 이게 주민수가 적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군단위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이 이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다양한 범위를 연구를 해야 하겠지요. 이와 연계해서 주민1인당 기타이전비용을 보시면, 사회복지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공무원 1인당 급여, 이 부분이 홍보를 하면서 많은 어려운 면이 많았습니다. 10월에 발표를 했을 때 언론에서 자극적인 기사들이

나와서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국가가 발표가 되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분석기사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군과 시도가 인사교류가 아무래도 적습니다. 승진에 임박하신 분들이 도청에 집중되어 있다보니 급여부분이 많고, 인사교류가 활발한 곳이 하위직이 분산되어 있어서 공무원 1인당 급여가 낮은 형태로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국가 재무지표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단순비교는 어렵고, 현재는 외국지방자치단체나 기업회계와 비교하는 정도, 앞으로는 저희도 정보가 축적되고, 국가도 의미 있는 분석을 하게 되면, 연결부터 기초적인 부분까지 심도있는 토론을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지표개발할 때 다양한 부분을 수렴을 했었고요, 여기 참석해주신 정부회계학회 교수님들과도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개발된 지표고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될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표활용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은 발전방향을 보시면은 사실 올해 말씀을 드려야할 것이 복식부기가 한시적인 조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목표가 정식조직화 하는 것이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애초에 정규조직 150개 조직에 750명 정도로 복식부기 업무의 기초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2008년 말 복식부기 전담조직은 20여개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업무담당 공무원도 400~500명 정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내년 정도가 되면 국가가 전반적으로 복식부기를 시작을 합니다. 올해 말부터 국회의원이나 감사원에서 자료요청도 많아지고, 내년에는 이 복식부기에 대한 불협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복식부기 저변이 정부 내에서도 그렇고 기타 언론이나 지역사회에서도 확대되고,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확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 행안부에서는 복식부기만 하다가 단복식부기 같이 합니다. 앞으로도 분석업무에 대한 강화도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은 정부방침은 감축으로 정해져서 어렵지만, 내년에 자연스럽게 확장되면 지자체도 같이 갈 수 밖에 없을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석기법을 고도화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행정안전부는 깊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 자치단체가 2차적인 분석, 여러분들이 해당 자치단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정책결정자들에게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다만 과도기로서 이 부분은

분명히 시도되어야 하고, 이 부분은 앞으로 확장이 될 것입니다. 전문인력도 확보를 하고, 저희들과 함께 분석하는 것도 고려중입니다. 내년에 제도연구를 심층적으로 해서 합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또 올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체단체의 원가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것도 1~2년 개발과정을 거쳐서 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합니다. 저희와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니, 복식부기 제도를 정착 발전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모범적인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활발한 의견제시 해주시면 저희들 귀담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재영(사회자, 한국방송통신대)

- 송사무관이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지자체에서 많이 오셨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발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 중앙정부의 재정회계지표 델파이 조사 결과를 이효 박사님께서 발표해주시겠습니다.

○ 이효(발표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근무하는 이효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중앙정부의 재정회계지표의 개발입니다. 이 주제는 학회에서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의 화면을 보시면 전체 목차는 저희가 모두 3차례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조사별 요약과 마지막에는 그 결과를 모두 모아서 재정지표 통합안을 한번 만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통합안을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중앙정부의 재정회계 지표를 최종적으로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연구목적은 이제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2009년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시범운영하고, 2011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정부부문의 재무회계 지표이기 때문에 일반기업의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고, 정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정부회계지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사의 목적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회계 학회에서 조사를 처음 구성할 때, 연구의 대상으로서 복식부기 발생주의정부

회계제도라는 것이 과거부터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특성을 살펴 보면서 정부활동의 차이점을 밝혀내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체의 모습은 비슷할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내용은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는 델파이 기법으로 바람직한 국가재정회계지표의 목표를 도출하는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바람직한 지표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 취합을 통해 재정회계 지표가 어떤 전체적인 구성틀을 가져가야하며, 각 지표별로는 어떤 지표가 더 타당성이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전체 340명 학회회원에 게 메일 발송을 해서 총 34분이 회신을 주셨습니다. 여기서는 기존의 재정회계지표 유형을 놓고 우리가 중앙정부의 재정회계지표 유형으로 추구해야할 유형은 어떤 것인지 설문했습니다. 실제 지표의 목표가 어떠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가? 자세한 내용은 본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의 경우에는 2006년도 행정자치부의 회계지표를 활용하여 전체 틀은 목표 가치를 중시하여 지표들과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복식부기 재정지표를 새롭게 구성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첫 주제발표에서 다룬 총 40개의 회계지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표의 목표가치보다는 재정활동영역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미국의 지표를 활용하여, 핵심적인 정부영역이 무엇이나에 초점을 맞춰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본의 경우로, 각 재무 지표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재무 지표를 조합해서 부채삼각비율이라던가 감가삼각비율이라던가 복식부기의 특성을 많이 반영한 것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A회원의 의견으로 해서 건전성, 생산성, 국민관심사항 등으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구분에 대해서 총 34분의 의견을 보시면, 2008년 지차체, 미국지표, 그리고 A회원의 지표가 좋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재정지표를 참고하여, 정부의 특성을 반영해야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1차 조사 마무리로 A안, B안의 지표유형을 도출하였습니다. 지표의 목적인 무엇인가에 따라 건전성, 성장성, 성과효율성, 책임성, 국민관심사항으로 놓고 봤습니다. 그다음 B안은 재원조달, 재원 배분, 정부의 각 기능 분야별로 여기에

맞는 지표를 선택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날 것 인가하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A안이 더 좋다는 의견이 조금 앞섰습니다. 이것은 A안 응답자의 경우 구체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A안에다 B안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또 반대로, B안을 선택하신 분들은 A안을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셔서, 이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A안의 요소는 대외적으로 활용하고, 내부감시용으로는 B안이 좋겠다는 결론으로 이 두 방안의 연계방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제 3차 조사에서는 총 36분이 회신을 주셨습니다. 이 통합안에 대해 설문을 하였는데, 통합안의 경우는 목표 가치라는 것을 중앙에 두고, 좌측의 경우에는 재무 지표 상에 나타나는 유용한 정보를 활용하고, 우측을 보면 아까 B안처럼 자원배분의 경우에, 재무성과의 경우에는 무엇을 봐야하는가라는 식으로 묶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았는데, 자산관련해서 통합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시면, 처음 제시된 지표를 탈락시키고, 중요한 것은 첨가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총자산유형별 증감율, 채권회수율, 조세채권비율, 유동비율 등과 같은 것을 중요한 것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정부의 자산을 유동하고, 고정을 나눌 수 있다면, 이 비율 속에 필요한 자산만 포함을 시키면, 상당한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부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부채비율이 있는데, 중앙정부의 경우에 이를 적용할 때, 만약 부채 비율을 GDP대비 부채총액을 하는 경우에, 부채총액을 어떠한 기준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IMF기준에 따를 것이냐, OECD기준에 따를 것이냐, 한국은행 기준으로 할 것이냐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어떠한 지표가 산식이 있고, 용도가 있고, 이용자가 있고,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용도로 쓸 것이냐에 초점을 두고 종합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수익관련 검토결과는 총수익증감률, 운영수지비율 등 이런 것들은 수익관련해서 꼭 필요한 지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용관련해서는 검토결과가 총비용증감률, 성질별 비용증감률 등 맨 밑에는 행정운영비용 증감률같은 경우는, 인건비라던가, 조직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포함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관심지표의 경우에는 GDP대비 순채무비율이라던가 사회보장비 증감률, 인건비 증감률로 봤고요, 자원조달부문에서 봤을 때는 조세수입하고 채무채권으로 해서 주요한

분야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안의 경우에는 정부가 하는 일에서 중요한 부문별로 구분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재정회계지표의 구성안이 나와있는데요, 일단을 가장 중앙에 보시면, 지표의 카테고리 유형은 지표의 목표가치 중심으로 두는 것을 좋다고 생각을 해서, 건전성, 생산성, 성장성, 활동성 이렇게 봤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본지표, 보완지표로 나누었습니다. 건전성을 보면, 기본지표 4개가 있지만, 불충분한 경우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연구의 제약과 한계점을 말씀드리자면, 실제 업무담당자의 의견을 좀 더 수용한다면, 좀 더 실용적인 지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심재영(사회자, 한국방송통신대)

- 이효 박사님도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예정대로 진행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김헌회계사님이 복식부기 회계에 있어서 중앙 지방간 재정지표 불일치 해결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 김헌(발표자, 한미회계컨설팅)

- 방금 소개받은 김헌 회계사입니다. 앞에서 송상훈사무관님과 이효 박사님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목은 조정방안으로 되어있었습니다만, 아직 아시다시피 지방의 경우에는 이미 정보가 산출되고 있고, 재정회계분석까지 이루어져있는데, 아시다시피 국가는 회계기준 자체가 법안통과는 되어있지만, 실제 시행이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국가는 아직 이상적인, 학습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구성이, 이러이러한 지표가 좋겠다는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계를 말씀드리는데, 조정대안으로 되어 있지만, 국가는 시범운영 후 산출이기 때문에 재무제표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조화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재정상태분석은 의사결정을 할 때, 양자의 통합분석과 같은 목표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조정방안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방향에서 본 내용이 검토되었고, 이것은 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이효 박사님하고, 다른 회계사 한분하고 함께 토의한 것을 제가 요약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관점이 지방회계기준과 국가회계기준의 차이를 보면서 정부지

표의 특성들, 그리고 외국의, 선진국의 나와 있는 지표들, 그리고 기업의 지표에서 사용될 만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회계기준의 차이가 회계정보의 차이를 가져오고, 그로인해 분석지표작성에 제약이 생길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예컨대, 지방의 경우에 운영보고서가 기능별로 나온다고 되어 있지만, 그 당시 총원가 내지는 총비용 방식인데 비해서, 관련된 수익을 차감하는 소위 순원가 방식입니다. 그런 부분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국가기준과 지방기준으로 하여 주요한 차이를 크게 3가지로 제시해보겠습니다. 먼저, 재무제표 및 과목의 차이, 공시되는 정보의 범위의 차이, 그리고 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의 차이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재무제표 및 개념과목의 체계의 차이는 크게 국가의 경우에도 지방과 마찬가지로 재무제표의 구성이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로 해서 같이 되어있는데, 지방의 경우 고유재산이 없다, 국가의 경우 연금부채나 보험충당부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별도구성이 되어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운영보고서 쪽은 보시는 것과 같이 기능별 보고를 하고 있으면서 국가는 순원가방식으로 하고 있고, 국가의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두 단계로 작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관서 부처별로 작성이 되고, 국가 전체별로 작성이 되는데, 소위 부처별 재무제표 작성을 할 때는 프로그램 사업별로 작성을 하고, 국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부처별로 작성하고, 순원가 방식으로 공시되는 것을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은 고시정보차이라고 분류를 해본 것인데, 국가에 비해 지방재정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는 회계기준법에 의해서 2009년 1월 2일 이후 시행일정 이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 최저가액이 한계수정이 안된다 그러면 인식하지말고, 필수 보증 정보로 공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아마도 지침에서 국가도 과목의 한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혹은 저희 쪽의 내용을 참고해서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시유예조항이 있는데, 최소한 저희처럼 미치지 못하더라도, 특정시라던가 미국정부처럼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침 상에서 특정한 시기별로 평가 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경우에는 현대가치평가기준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감가삼각이 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지방의 경우에는 성질상 감가삼각을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서비스 수준이 유지된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외하는 경우에 지방의 경우에는 공시가 되게 되어 있는데, 특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단 중앙부터가 기준예산부서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면 지방에서 실무적으로 제외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시더라구요. 이러한 것들의 차이가 재무분석의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부회계지표를 살펴보았는데, 재정수지과약이라던가, 채무부담수준, 조세부담수준 같은 것들에서 각 다른 목표를 가지고, 지방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재정지표가 구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옛날 얘기입니다만, 아까 송사무관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이미 또 데이터를 돌려서 29개의 지표를 가지고 분석한 내용은 첫 번째 발표와 내용이 같습니다. 해외의 경우에 자세한 내용 참고하시고요. 선진국의 사례를 모집단에 포함시켜서 보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업의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아시다시피 기업의 경우 한국은행과 공인회계사회의 감사를 받아 감사보고서에 쓴 지표가 몇 가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유동성, 자본구조, 수익성, 활동성, 수익성, 시장가치 등 지표의 구조만 보셔도 목표의 방향성이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경우에는 목적의 차이는 있더라도 변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국가의 경우에는 부채의 경우 예컨대 금융이나 중앙정부나 통화 관련한, 지방하고는 다른 사업 관련한 것이 아닌, 그러한 것이 존재한다. 따라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는 정부의 경우에, 지방도 마찬가지로, 사회기반처럼, 공공성 기반 시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채비율이나 관련된 자산비율분석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변형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자금이 있어서 지방이나 국가가 동일합니다만은, 법규에 따라서 유보된 부분이 많습니다. 자금이 들어가는 지표분석 할 때는, 자금 중에 보조금 잔액이나 세금 중에 독립성이라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지표에 자금이 들어가는 순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조정방안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방식으로 말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어떻게 목표가치를 구성할 것인가, 아니면 운영보고서를 구성할 것인가. 저희는 목표가치의 구성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재정관리에 대한 기본원리들, 최근의 재정에 대한 경향, 이슈 이러한 것을 고려해가지고, 건전성, 회계책임성, 성과관점에서 채무관리 이러한 것들을 넣어 봤고요, 지표구성을 할 때, 중심으로 많이 고려했던 것이 정부회계학회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단계로 볼 때, 기업회계에서 변형이 된 것들, 그 다음에 지방회계지표들, 학회에서 특히 제시된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보니까 97개 되더라구요. 100개가 조금 안되는데, 크게 두 단계로 나눴습니다. 1단계에서는 재정통계와 유사한 영역으로 가서, 정보영역으로 해서, 주로 인원대구성비에 대한 사안들, 그 다음에 증감율에 대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통계관련 지표를 주로 재정상태분야으로 해서 구성을 해봤고요, 일반적으로 쓰시는 목표가치 관점에서 건정성, 활동성 등 20개 지표를 넣어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1차지표와 2차지표가 서로 연관성을 가지면서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상적인 관점에서 제시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제한적으로 총 37개 지표에 대해서 제시를 해봤는데요, 데이터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제시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비교를 할 때 제도적으로 상이한 점에 주목하여 지표 자체는 이효 박사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과정중심으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감사합니다.

○ 심재영(사회자, 한국방송통신대)

- 네, 김현회계사님께서도 시간을 잘 맞춰 주셔서 예정보다 5분 먼저 끝을 냈습니다. 잠시 30분까지 휴식을 취할 예정인데요, 토론시간에서 3분이 토론을 해주십니다. 10분 정도해서 30분정도 하게 되면, 약 50분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방청객 여러분들도 쉬는 동안에 미리 좀 질문을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5분 정도 휴식을 한 후에 3시 30분부터 토론 세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 이효 연구원님(진행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예, 그럼 지금부터 세미나 종합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선생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토론자, 발표자 선생님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심재영 교수님(사회자, 한국방송통신대)

- 휴식시간 잘 쉬셨습니까?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참가하신 선생님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제 옆에 제주대학교에 김동욱 교수님. 그리고 중간에 계신 재정공학연구소 소장님이신 박정수 소장님. 그리고 맨 왼쪽에 연세대학교 엄태호 교수님.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각 토론자께서 한 10분 정도 토론을 하시고 나머지는 방청석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엄태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엄태호 교수님(토론자, 연세대)

- 저는 순서대로 하는 줄 알고 맨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처음이어서. 저는 행정학과 교수입니다. 근데 이제 회계학을, 지방재정이나 그런 관점에서 오늘 나왔던 세 페이지에 대한 좀 제 소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기대하던 얘기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근본적인 얘기를 갖다가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10월 달에 미국재무행정학회에 가서 거기서 Gsb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표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총책임실무자인 딘 리드라는 director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계속하다가 지표를 만들고 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표의 유용성이 뭐냐 라는 거 때문에 미국 교수들과 debate를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성과를 빼놓고는 지표의 의미가 굉장히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관점에서 제가 오늘 나와 있던 지표나, 여러 가지 보면서 했던 고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틀 전에 또 어떤 모 학교에서 박사논문 외부심사를 갔었는데요. 그 박사과정 학생이 썼던, 그러니까 종속변수로

썼던, 해석을 하려고 했던 지표가 뭐였냐면, 여기 나와 있는 06년도 지방재정 지표 중에서 자주성, 안전성, 효율성이라는 지표를 썼습니다. 실제 논문의 제목이 뭐였냐면 이 안전성, 자주성, 효율성 이러한 지표들에 어떤 정부정책이 미치는 영향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에는 논문이 통과가 되질 못했습니다.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신 분이 정부회계학회를 사실상, 정부회계학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데 큰 역량을 행사하신 윤성식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두 분하고,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다가 결국에는 얘기가 나온 것이 뭐냐면 그 지표가 과연 안정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표가 정말 효율성을 얘기하고 있는가 지방정부의 효율성이라고 말한 그 지표가 정말로 효율성을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상태, 그리고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며 그리고 이 지방정부가 했던 것에 대한 평가를 과연 그 단순한 지표로 얘기할 수 있겠느냐 라는 회의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었었는데요. 그 사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근본적인,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간,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민간과 공기업과 그리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놓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근본적인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민간 기업이 쓰고 있는 지표를, 운영에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aspect를 갖다가 잡아낼 수 있는 정도가 어디까지인가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일단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세입측면으로 보면 지방세가 있구요, 세외 수입이 있고 그리고 이전재원이 있습니다. 교부세와 비슷한.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방세 같은 경우에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방세율이 국가에서 정해져있죠. 물론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높이는 데는 지금 한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낮추려고 하는 데는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교부세는, 지방세 텍스 베이스가 차이가 나는 부분을 갖다가 equalize 시키고 싶어서, 형평성을 제고하고 싶어서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형평성을 제고하는 그런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방정부가 세입측면에서 갖고 있는 유동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아요. 지방정부가 더 걷고 싶어서 매출을 늘린다든지 하듯이 여기 수입을 갖다가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적습니다. 또 하나를 보면 세출 측면으로 보면 세출측면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제가 한국말을 물어봤더니 이전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가 이미 정해진 비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주고 안주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가재정에서 결정된 것을 지방비를 얼마나 내고 줄 수밖에 없는 비용이예요. 그런 비용들을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민간기업의 지표를 원용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어불성설이란 얘기죠.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돈을 쓰고 모든 것을 자기가 합니다. 그런데 지방정부는 자기가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어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미국에서 이런 것을 쓰는 이유는 뭐냐하면요, 미국에서 지표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민감한 이유는 그 쪽에서 실질적으로 지방세를 걷습니다. 지방세를 결정하고 그리고 얼마를 쓸 건가를 결정하고 주민이 직접적으로 걷는, 한마디로 말하면 분권화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발달된 상태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구요. 그 다음에 SMP나 Moodys 같은 데에서 평가를 할 때에 여기 article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들이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지방정부의 건전성과 이런 걸 다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 지불능력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채무의 양도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지방세를 거둬들일 수 있는 것도 적고 그 다음에 지방세가 적었을 때 중앙에서 이전재원이 더 많이 들어오고, 이러한 여건, 굉장히 fix 된 여건 하에서 성과라는 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수익성이 높다, 자산이 많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채비율이 높다고 얘기를 하면 그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이 민간 기업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쁜 겁니까? 그리고 수익성이 높다고 지방세 자체수익성이 높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수익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그냥 그렇게 된 것뿐 이예요. 그냥 happen to be 이고 여기나오는 회계책임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현황표입니다. 여기 나와서 일인당 수익 일인당 부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그냥 그게 이렇게 된 거를 얘기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가 책임 하에서 무

언가 business를 해서, 사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은 지표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저는 조금 델파이기법에 참석을 하면서 답답했던 것이 제가 항상 맨 마지막에 제 의견을 썼는데 제가 무슨 의견을 썼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 고민이 해결되지 않아서 과연 여기에 있는 지표들이 우리한테 맞는 것인가. 여기나오다 보면 민간지표를 원용하는데 찬성하는 분이 11분 정도 되구요. 미국지표를 원용하는데 그걸 쓴다는 분이 11분 정도 되는데 미국지표는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민간기업도 완전히 다른 것이예요. 완전히 다른 데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표를 우리한테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이거 자체로 굉장히 신문 기삿거리가 될 수 있고 순위를 매길 수는 있겠지만 과연 정당한 지방정부의 평가가 될 수 있냐에 대해서 저는 지극히 회의적입니다. 대안이 뭐냐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 때문에 명쾌한 대안을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게 답답한 일이지는 하지만 그래도 재무회계에서 나올 수, 우리 이 회계시스템에서 나올 수 있는 정보는, 그리고 우리가 유용하게 성과라는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업별순원가정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얘기구요. 지자체가 비교할 수 있고 사업 간에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원가정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정부회계기준에서는 사업별 실무원가가 자세히 나오는 기준으로 되어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식을 갖다가 원용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만, 단기순익이라는 것은 지방정부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지방채회전율이 있는데요. 제가 지방채, 정부지방채 심사위원으로 가서 일을 하다보면, 질문들이 있습니다. 지방채를 갖다가 발행하는 지방정부의 behavior와 민간에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민간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은 돈이 모자라는 것이예요. 당연히 모자라니까 하죠, 지방정부도. 이를 갖다가 지자체장이 안하겠다고 맘을 먹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채권이 얼마 있다, 지방채를 얼마나 발행했다, 지방채를 얼마나 갚았다고 얘기해서 그쪽에서 부채비율이라든지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순원가라는 개념이 빠진 현재의 상태에서 지표는 제가 볼 때는 현황을 나열해 놓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두 번째는 좀

더 복잡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원가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부가 가지는 원가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 인건비라든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은 혹시 생활보장, 기초생보비용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초생보를 갖다 지급을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원가가 얼마니까. 그럼 결국에는 거기에 사람이 한 명, 두 명이 들어가죠. 어떤 데는 세 명을 하고 어떤 데는 한 명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생보 수급대상자한테 돈을 갖다가 주는데 똑같이 천명, 천명을 관리하는데, 당신네는 왜 한 명이 관리를 하고, 당신네는 왜 두 명이 관리를 하느냐. 두 명이 관리하는 데가 원가가 높으니까 너는 돈을 너무 많이 썼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쪽에 패널티를 주고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뭐냐 하면 한 사람이 평가를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아무리 짜내두요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퇴근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요. 민간기업과 다른 것은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수급자 관리를 안하게 되면 부정수급자가 늘어나게 되고 부정수급자를 관리를 해서 적발을 해 나가면 그 사람이 complain을 합니다. 그럼 complain 해서 일을 하기 싫으니까, 일이 너무 벅차니까 안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사람을 적게 쓴다는 거. 사람을 그렇게 써서 원가정보에서 회계정보가 나왔으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떤 지자체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회보장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지표만으로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때문에 사실은 지표로 많은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시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제가 너무 시간을 갖다 over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심재영 교수님(사회자, 한국방송통신대)

- 시간은 over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잘 지키셨고, 다음에는 박정수 소장님께서 comment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수 소장님(토론자, 재정공학연구소)

- 박정수입니다. 사실 엄교수님께서 제가 할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할 부분이 많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엄교수님은 행정학자의 측면에서 회계 사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고 저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래 99년부터 복식부기 일을 했지만 2006년도부터 실무 재무제표 데이터, 뭘 보려고 하는지 우리가 만든 재무제표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우리가 뭘 보여 주려고 하느냐에서는 관심을 갖고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기업이 재무제표를 만들면 일반 유동성비율이라든지, 자본구조 비율이라든지, 수익성 비율이 우선으로 갑니다. 제가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를 돌려봐도 부채비율, 유의미한 데이터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솔직히 저는 복식부기를 이런 용역을 많이 한 사람으로써 회의를 많이 느꼈습니다. 과연 이 데이터가 복식부기를 하는 게 기업에서 하는 수익성이나 유동성 부채비율 이런 것들 위주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과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만든 재무제표에는 유의한 정보를 줄까 고민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기계신 정부회계 학자분들 그리고 행안부의 공무원 분들과 합동해서 2006년도부터 행안부에서 이런 지표를 개발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의 지표가 나오기까지 2006~2008년까지 상당기간동안 지표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걸 보면 그 당시의 지표와 지금은 상당부분 많이 바뀌어있고, 오늘지표는 제가 봤더니 40개 지표에서 29개 지표로 변동된 지표도 상당히 유의한 지표가 된 것 같더라. 그렇다면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해 봅니다. 그러면 정부 어떤 재무지표에서 순위가가 당연히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순위가를 만들 때까지는 제도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은 제약 조건이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위가를, 순위가 데이터를 만들 때에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가용된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정보가 무언지 계속 연구해야 된다. 제가 이제 교수님께서 순위가 말씀하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걸 한 번 해결해보려고 어떻게 했냐면 2년 전인가 부천시 Philharmonic과 성남시 Philharmonic에 과연 들어가는 원가가 얼마지를 계산해 봤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부천시 Philharmonic에 들어가는 모든 인건

비 부대비용을 다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Philharmonic에 들어가는 모든 들어가는 부대비용 또는 오버헤드까지 다 계산해서 해봤더니만 그러면 뭘로 나눌까냐, 관객 수로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에이 자치단체 1인당 관객 수 들어간 비용이 15000원이고 비 어떤 자치단체 Philharmonic 1인당 들어간 비용이 18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15000원과 18000원은 3000원 차이가 나지만 원가측면에서 보면 15000원 자치단체가 원가측면에서는 이익이지만 과연 오신 분들이 관객들이 만족도가 어떤가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 그래서 아마 행정에서 나온 지표들이 순원가가 100%맞지만 이런 것들이 제가 부딪혔을 때 과연 이게 문제가 된 것을 봤을 때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들도 했을 때는 좀 고려사항이 되어야겠다. 저는 그런 예를 한 번 들어본 거구요.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오늘 지표들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지표도 아직 뭐 계속 변화되는 상태에서 중앙지표까지 오늘 발표를 했는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어떤 지표를 만들던 여기 계시는 공무원, 복식부기 팀들이 시스템적으로 자동적으로 산출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없다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여기에 아무리 좋은 지표를 만들어놓아도 수작업을 하거나, 계속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친다면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가 어떤 원하는 지표들이 행안부 복식부기 팀을 주도로 해서 시스템적으로 자동적으로 출력되어서 비교·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방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김헌 회계사님이나 이렇게 발표한 내용 중에서 몇 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지표를 검증할 때 중앙과 지방 발표를 했으니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중앙과 지방의 지표의 결국 기준이라고 기준에 나온 데이터들이 어떻게 반영 되는가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아까 발표한 내용 보면 사회간접시설은 어떤 재무제표에서는 반영하지 않는다 하고 있고 그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간접시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산을 분류를 해보면 자산에는 일반유형자산, 그 다음에 사회기반시설, 주민편의시설이 있는데 상당부분 거의 많은 자산이 사회기반시설의 자산입니다. 그러면 중앙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을 어떤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지방만 한다면은 과연 그것이 나중에 지표로써 유용한 정보가 나올지 그런

것들도 의문이 있구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출납기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중앙기관은 없는데 지방정부는 그것을 적용하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복식부기가 단식부기를 리드할 것 같으면 그런 분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내고 마치겠습니다.

○ 심재영 교수님(사회자, 한국방송통신대)

- 네, 다음은 김동욱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 김동욱 교수님(토론자, 제주대)

-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에서 회계학과에 있는, 학생을 가르치는 에이형의 남자 김동욱입니다. 이제 빡빡하게 제 성함만 여러분한테 전달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에이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먼저 토론을 했어야 했는데, 저는 이제 여기가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멀리서 비행기타고 오신 분들한테 시간을 많이 배려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 먼저 엄교수님께 혜택을 드린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산의 모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학회 포천까지 산 넘고 물 건너서 6~8시간 걸려서 오셨는데 달랑 3분하고 끝나버렸어요. 억울하다고 자기가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3분 하려고 여기 왔는지, 자괴감이 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손님을 맞는 입장에서 배려를 했는데 시간을 많이 쓰지 않으셨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의 도입에서 복식부기 발생주의에 대한 재무보고서를 만들고 있는데 사실 이제 미국하고 태생적으로 다릅니다. 인제 예를 들어서 미국의 Gsb의 기준은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사항이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2007년 1월 1일부터 동시에 모든 지방자치단체 246개가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미국에서는 Gsb가 시장기능에 의해서 그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 왜 지방채를 발행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왜, 지방채를 발행하면은 Smp나 Moodys에서 신용평가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Smp나 Moodys에서 요구하는 것이 Gsb에서 유

효한 회계기준에 의한 그런 재무보고서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 기능에서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다르지요. 미국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때, 보통 이제 tax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소위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지방채이죠. 또 지방은 수익펀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Rv라고 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지방세법에 보편은 지방자치단체의 인프라를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지만 수익사업을 위해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지방채의 발행 한도도 제한이 되어있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행안부에서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매뉴얼이라고 요즘 얘기를 하지요. 그거에 의해서 거의 봉어빵 찍듯이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이지요. 없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최근에 한 9개인가 처음에 저희들이 부천시, 강남구가 먼저 선도를 했고 나머지 또 7개 무주, 순창, 전북 이렇게 해서 7개가 더 추가되어서 9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일 선두적으로 노하우를 쌓으면서 아마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개의 재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재정분석지표를 제가 모아서 계산을 해봤더니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그 얘기는 아직도 재정보고서를 만드는 안은 되어있지만 그것을 다루는 여러 가지의 것들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시도별로 이렇게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편차가 너무 심해서 재정분석지표를 만들기 전에 로우데이터가 아직은 서로 검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금년, 2008년 5월 달에 감사 회계사에 의해서 재무보고서가 공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의 기업에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고 난 후에는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랜덤으로 해서 감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검증이 되지를 않아요. 이걸 제대로 작성이 되어있는지 안되었는지 공인회계사 여기 제주도에 있지만 잘 모르는 겁니다. 제가 금년 5월 달에 제주도의 예산결산 검사 위원으로 갔었습니다. 회계사들 모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우데이터 자체가 지표를 만들기 전에 로우데이터 자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해서 감리 형태이지요. 여기 보니까 감사 대신에 검토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행안부에서 최소한 246개 지

방자치단체 만든 데이터가 올바로 되어 있느냐, 물론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지만 그 감사에 대한 그런 숫자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재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서는 여기 나와 있는 재정지표분석을 만드는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로우데이터가 엉터리고 신뢰성을 잃어버리는데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급한 것은 재정지표분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로우데이터가 좀 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식을 똑같이 공유하고 행안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맞게끔 정확하게 회계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정말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9개 지방자치단체가 제가 아마 우리 학생을 통해서 여기 관련되시는 지방자치단체에 전화를 드려서 그 2007년도 그 다음에 2006년도 회계연도에 회계자료를 좀 요구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목적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의외로 왜 9개를 했느냐면,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봤더니 굉장히 그 재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15개 지표가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빨리 실행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하고자 하는 재정지표분석 지표들이 이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맞는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발생기준 복식부기의 특징을 잘 살려낼 수 있는 재정지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산의 거래 같은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것들, 또 감가상각 충당금, 방위산업비, 대선충당금 특히 이제 기금회계에 관련된 것은 이 대선충당금이 굉장히 유용한 변수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금 같은 것들은 거의 사업성 회계가치 내에서 돈을 쥐주고 받고 이러한 사업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또 대선도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들인데, 불행스럽게도 2008년도 작년도 우리 만든 재무보고서에서는 그런 정보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시범으로 만들 때는 그게 있었거든요. 기금회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2007년도 회계연도에 재무보고서에는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아서 좀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재정상태 보고서나 재정운영보고서를 우리가 두 개를 만들어 냈는데 좀 크로스해서 만들 수 있는 비율을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

는 재무비율들은 재정상태보고서에서 그 다음에 재정운영보고서에서 그게 나와 있는 비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업회계에서 보면서 크로스 되는 그런 비율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서 맞물려서 하는 그런 비용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외 또 여러 가지 할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나중에 또 토론 같이 하면서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심재영 교수님(사회자, 한국방송통신대)

- 제가 토론자를 좀 쉽게 소개를 했었는데, 소개를 간단히 했더니 스스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김동욱 교수님은 제주도에서 정부회계를 전담을 한 것으로 부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주도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최근에는 수도권까지 진출을 하셔서 실력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토론자 세 분의 토론을 들었는데, 방청석에 또 의견을 주실 분 계신가요?

○ 전중열 교수님(Floor 질문자, 서울산업대)

- 예, 서울산업대학교의 전중열 교수입니다. 앞에 계신 7~8분의 선생님들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뒤를 돌아서 얘기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여러 분야에서 중앙정부라든지 혹은 지방정부에서 이 재무분석지표를 보완하느라고 애를 많이 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저희도 그런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 항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는데 지금 여기 재무분석지표에서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업 쪽에서 처음 아이디어가 나온 거고 그것이 지방정부라든지 중앙정부에 이제 잘 적용이 되는 그런 단계에서 지금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무비율분석, 재무제표에 대한 항목과 항목간의 분석의 제일 큰 목적은 사실은 우리가 A라는 기업이라든지 어떤 조직에 대해서 재무비율분석을 한다는 것은 그 기업 전체에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 같으면 우리가 뭐 유동비율이라든지 단지 지급능력이 얼마가 되느냐 또 우리가 레버리지 혹은 안정성비율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장기지급능력이 얼마가 되

겠느냐 수익성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과연 이 기업이 과연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냐 그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이 사실은 분석을 하는 제일 큰 목적인데 만약에 그러한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못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얘기한 기업 같은 한 6가지 분야에서 유동비율분석이라든지 장기지급능력분석이라든지 한 6가지 분야에서 어떤 각각 분야별로 이 회사는 어떻다 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기업에서는 그런 정도까지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발표된 행안부의 안, 재정상태 9개 지표가 있고요, 재정운영 9개, 회계책임 총 11개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에이라는 지자체에 대한 것을 분석을 했다 에이라는 지자체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를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거 얘기가 지금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큰 분야로 나뉘었는데 그러면 재정상태의 9개의 지표, 그것을 쭉 해서 분석을 하면 과연 A라는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어떠냐를 얘기해줄 수 있겠느냐하는 게 지금 근본적인 문제점이고 각각에 대한 것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9개가 모여서 재정상태, 재정운영도 또 9개의 지표가 있는데 그게 모여서 재정운영이 어떠냐 할 수도 있고 동일한 어떤 방향성을 지정하지 않을 때 과연 해석을, 분석을 어떻게 해 낼 수가 있느냐가 제일 큰 문제점이구요. 또 중앙정부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리 정부회계학회에서 여러 가지 애를 써서 만든 지표들이 있는데 아까 한 4가지로 나뉘었죠, 건전성이라든지 뭐, 뭐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지표들이 과연 건전성이라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나올 수 있게 되었느냐, 저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토론해주신 엄교수님과 입장이 좀 비슷한데, 현상에 대해서는 각 항목적 비율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줄 수가 있는데 과연 그것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조직 전체에 대한 것을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 대답을 못할뿐더러 또 조직을 한 4가지 또는 6가지로 영역을 나뉘었을 때 각 영역별로 정확히 움직이고 있느냐 그것조차도 얘기를 하지 못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재무비율분석의 어떤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나하나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도 엄교수님과 똑같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상당히 답답한 마음인데, 과연 이것을 없는 지금 머릿속에는 대안이 없지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표명할 수 있는 그런 지표설정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항목

항목에 대한 것만 고려하다보니깐 전체 방향성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재영 교수님(사회자, 한국방송통신대)

-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 백진환 회계사님(Floor 질문자, 대주회계법인)

- 대주회계법인에 근무하는 백진환 회계사입니다. 우리 그 발표자님들이나 토론하시는 분들이 아주, 발표자 분들은 열심히 분석을 해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였고 토론자는 이거 목표도 없이 딴 데서 한 거 베껴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교수님들 말씀이 사실은 피상적인 게 많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방향 제시를 하는 거고 저는 회계사다보니까, 회계사로 한 30년 하다보니까 뭔가 이것을 좀 부여를 해야겠다 해서 찾아보려 그래도 이게 아까 우리 제주대학교 교수님 말씀하신대로 회계사들이 잘 몰라서 지도를 못한다는 말씀 그거도 그런데, 사실은 그것들이 연세대 교수님도 아주 강하게 니네가 열심히 했지만 그것을 훔내내서 되겠냐 아주 강한 비판을 우리 실무자들은 겹허히 받아야 되고 연구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참 피나는 노력을 한 거 같습니다. 뭔가 만들어 내야 되는데 사실 저도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아까 연세대 교수님께서 잠깐 힌트를 주셨는데 성과지표, 결국은 소비자가, 소비자는 누구니까, 결국 이용자는 국민이나 주민이거든요. 주민들이 재무제표를 보고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낸 세금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얼마 냈다는 게. 근데 자기가 세금을 내고 혜택을 받은 게 얼마냐, 자기가 요만큼 냈는데 무슨 혜택을 받았냐, 그 혜택에 대한 지표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소위 내가 이만큼 세금을 냈는데 과연 이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나한테 준 게 뭐냐, 구체적으로 들어 가면은 치안서비스, 복지서비스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걸 지금 이제 계량화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회계사들의 제일 고민이 이런 필요성을 느끼는 게 어디까지를 계량화 해 가지고 이게 세금이 이만큼 있는데 거기서 나한테 돌려준 게 이만큼이다, 그래야 사람들도 기꺼이 세금을 내고 제가 봤을 때 스웨덴이나 이런 데는 세금이 60%나 넘어가는데 그 대신 또 받

는 게 엄청납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우리가 낸 것은 얼마씩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돌려받은 게 뭐냐, 학교 회계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등록금을 얼마 냈는데 내가 학교로부터 돌려받은 게 얼마나, 장학금으로 돌려받은 게 얼마나, 뭘로 받은 게 얼마나 이런 지표들을 지금 개발 중에 있거든요. 우리 정부회계에서도 주민들이 내가 낸 거에 대해서 혜택을 얼마나 받았냐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거고 나머지 지표들은 건전성 다 이해는 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부가한다면 그 서비스당 관련원가가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 있냐, 서울시 경우에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해가지고 프로젝트가 쪽 나오고 목표달성 해가지고 쪽 나오는데 그 예산 집행율을 가지고 쪽 나오거든요. 그럼 과연 예산은 다 들어갔는데 주민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목표달성은 되었는데 원가가 많이 효율적으로 된 거냐, 인제 물론 감사팀에서 봐야 될 게 주민들에게 주는 서비스를 분류는 유형화를 분류를 해가지고 그 서비스를 과연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냐 안했냐 이런 부분까지도 저는 주로 이용자 편에서 말씀을 드리는 데, 저는 실무자이면서도 교수님처럼 피상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상훈 사무관님(발표자, 행정안전부)

- 답변을 하고, 중간 중간에 물으시는 게 좀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님들하고 토론을 하면 참 좋습니다. 아낌없이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항상 일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합시다만, 몇 가지 잘못된 사항이 좀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검토는 분명히 감사의 이전단계로 애초에 제도에 세팅되었었던 것이구요. 그리고 감리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분들이 작업하신 검토 재무보고서랑 예산회계 결산서 개사를 두 달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이미 open을 했구요. 그리고 회계사님들이 검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교육을 이수할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이미 교육을 끝냈고 다음 주부터 있을 자치단체공무원들 결산교육에 그 사항을 교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사님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아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목에 독특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회계와 재무회계가 듀얼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님들이 검토를 하셨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못 고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작업을 하다보니까 단순 실수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대부분에 아마 그런 것들은 제도간의 차이로 인해서 생긴 것들이 대부분이었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미 다 걸러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첫 재무보고서였기 때문에 아마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보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제도를 일치화시키는 작업들을 올해 이미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 정도면은 결산제도 일원화 작업들도 곧 시작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제도적 측면들, 운영상 미숙한 부분은 이미 고쳐나가고 있는 수준에 와 있구요. 그리고 또 하나 분석지표를 지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특성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만들어내는 공무원들 입장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굉장히 이것 가지고 자치단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만 제가 아까 발표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복식부기 회계제도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이치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실을 뽑아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 공무원들 특히 이제 복식부기 담당 공무원들은 저희들은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바뀌기는 하지만 개념이 잡혀 계시지만 일반 대다수 지역주민을 포함해서 정책결정자들까지도 아직 자산이 뭔지, 부채가 뭔지 개념이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국가가 도입이 되어서 시행이 되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이해하시기를 재무정보를 산출을 해서 물론 분석지표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습니다.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행정통제에서 주민통제로 넘어가는 단계, 그리고 공급자 중심의 보고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흔히들 내는 기업의 평가를 할 수 있는 수요자중심의 보고서

라는 진행단계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에 대한 여지가 충분히 많구요. 그리고 지표의 구분도 원가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물론 회계에서 충분성, 완전성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제도를 세팅하는 단계에서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많은 정보들이 반드시 좋은 정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소화해서 만들어낼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현재 제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시작 단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양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여기는 이제 홍보용 그리고 언론에 공표하기 위해서 지표를 29개로 했을 뿐이지 사실은 이제 지출 과목별로 저희들 다양한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제, 아무래도 언론에 나가면 자치단체 행위에 제약을 가하는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선별적으로 해서 다만 이제 재정관리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그리고 지방자치 공무원들이 그 분석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지표들은 언제든지 양산을 해서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시스템이 와 있구요. 그리고 원가 부분도 분명히 저희들의 경우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 충분히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들 때쯤 제도 개선을 차츰 하나갈 계획이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아낌없는 애정과 그리고 많은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 제도 변화하고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심재영 교수님(사회자, 한국방송통신대)

- 네, 중간에 못 참으시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아낌없는 질문을 해달라고 지금 하셨으니까 아낌없는 질문을, 또 이게 정말 토론이 시작이 되는데 우선 엄교수님이 좀 말씀하실 게 있다고 하십니다.

○ 엄태호 교수님(토론자, 연세대)

- 예, 아까 김동욱 교수님의 큰 뜻을 모르고 제가 너무 짧게 한 것 같아서요, 제가 에이형입니다, 저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 때문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실 근본적인 얘기를 하신건데요. 내 돈 줬는데 정부가

뭘 줬느냐. 사실 그게 딜레마죠, 그죠. 그게 민간 기업에서 얘기를 할 때는 아까 얘기하실 때 오해가 좀 있습니다. 저도 회계사 생활을 한 4~5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정말 고민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정말로 어떤 근본적인 딜레마 때문에 나온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은 자기가 customer가 돈을 갖다가 그걸 사죠. 그런데 이제 정부라는 것은 자기의 서비스가 공공재이기 때문에 제가 낸 세금이 사회보장 받고 기초노령 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가고 저한테 하나도 안와도 저는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매치가 안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지방정부가 세금을 갖다가 내고 그 다음에 왜 주민들이 행안부에서 오신 분이 말씀하신대로 왜 감시를 하는 어떤 수요자 중심의 어떤 시스템을 만든 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는 뭐냐면요, 우리는 지방세를 어디에 가도 지방세를 똑같이 냅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제가 이사를 가도 제가 살고 싶어서 구로구로 가도, 강남구로 가도 지방세가 똑같다는 얘기에요. 어디를 가도 받는 거기 때문에 지방세의 편차가 내가 그렇게 concern하는 부분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사는 위치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구요. 미국시스템이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고 우격다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자기가 지방세를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을 뽑아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고 나면 그걸 갖다가 어느 사업에 쓸건가 말건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하신대로 그럼 이 사업하지 말자 소용없다 이것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구요. 우리는 공무원이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중앙부서에서 그걸 얘기를 해서 지방에서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따라서 자기가 낸 돈이 결국 여기에 있는 여기 있는 공공재의 자기 혜택과 완전히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은 너무너무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한 거였구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성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회계의 목적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customer한테 물어봐서 당신 구로구에서 이런 걸 받는데 당신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서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설문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도 지금 낸 거에 매치가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시스템이 아니라면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은 회계정보에서 줄 수 있는 선을 넘어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부전체 평가로 가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회계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그런 부분 때문에 딜레마가 되어서 그러면 질적 분석을 빼고 우리가 회계라는 숫자를 가지고 과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회계를 하시는 분들을 더 괴롭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무하시는 분들이 survival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훨씬 더 자세한 정보를 모으는 것입니다. 훨씬 더 자세한 정보, 데이터가 쌓여서 평가가 가능할 때 제가 거기에 서바이벌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든다면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은 비교대상이 없어요, 사실은. 환경부가 하는 사업을 어떻게 행안부가 하는 사업하고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하지만 지방정부의 원가의 의미라는 것을 보면 비교가 가능합니다. 왜 어떤 질문부터 나오기 시작 하나면, 사회복지 예산을 주는데 이쪽은 두 명이 일하고 이쪽은 한 명이 일하고 이쪽은 돈이 이만큼 되고 이렇게 되느냐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원가정보가 나와서 이쪽은 적게 쓰니까 너 참 잘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보를 다 입수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부정수급자 수, 거기에 차상위 계층의 수, 거기에 빈곤계층의 수, 그리고 뭐 어떤 수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듚성듬성 떨어져 있느냐 아니면 모여 있느냐, 다른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을 정보를 다 모은다면 그걸 다 모아서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여러분의 사업구별에 어떤 퍼포먼스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숫자로. 근데 그것이 안 된다면 이 상태로 지표를 그냥 들이 넣으면 여기서 넣어가지고 계산에 넣어서 딱 값이 나오는 것이라면 제가 보기에 여러분이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그냥 없는 겁니다. 해석능력이 되지 않고 그리고 아주 깊숙하게 데이터를 manage하고 commend하지 못하면, 이것을 갖다가 이 안에 한 꺼풀을 벗기고 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나오는가에 대한 여러분이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계정보를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performance를 얘기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거기가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별로 얘기를 하되 사업장 안에 지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표를 생성하기 되기까지에 기본 데이터, 여건, 모든 것을 직접하고 그걸 갖다가 그 인과관계를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는 선에서 제가 보기에는 재무회계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 정부전체 평가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계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심재영 교수님(사회자, 한국방송통신대)

- 갑자기 질문을 받다가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저기 그러면은 지금 앞에 교수님들, 회계사들이 주로 질문을 했는데, 사실 자치단체에서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의견들이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워 마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나라에는 질문하라면 질문을 잘 안합니다. 학교에서도 보면은 질문하라 그러면 질문을 대개 안합니다. 제가 방송통신대학 교수인데, 방송통신대학의 큰 약점의 하나가 two-way를 못하고 one-way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학교가 one-way 시스템입니다. 질문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송상훈 사무관님이 미리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질문 중에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10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상훈 사무관님(발표자, 행정안전부)

- 저한테 시간을 많이 주셔서 일단은 감사를 드리구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질문을 하시기에 쫄쫄러운 게 교수님들 너무 무서워가지고 공격을 하시니까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엄태호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충분히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도가 걸음마 단계라서 달리기를 바라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구요. 우리 실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어느 정도 수준은 인정을 해주셨으면 바라는 부분이고 특히 또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나면 물론 이제 저희들은 지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이러이러한 지표를 가지고 합니다 라는 조언도 받고 이런 장도 되겠지만 저희들 현

실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도 분명히 물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 지방재정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공무원들이 수작업을 하는 단계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물론 이제 결산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단계는, 체제는 갖춰졌습니다. 아마 이제 말씀하셨듯이 전문성 분야가 가장 중요한 부분 일텐데 물론 이제 공무원 사회가 순환보직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오신 분들이 질문을 안 하시는 이유가 쫓겨나올 수도 있겠지만 많이 바뀌었어요. 대부분 다 많이 바뀌었고 제가 작년에 강릉에서 workshop을 했을 때 계셨던 분들이 아주 일부만 남아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순환보직 문제도 있는데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조직개편하면서 복식부기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복식부기 업무에 있어서 7~8명이 투입이 되어서 한 명은 원가를 구성을 하고 또 한명은 정보를 산출을 하고, 현실은 시군단위별로는 한 두 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정보를 산출해 내는 데만 해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심도 있는 교육을 통해서 교수님이나 여러분 도움을 받아서 심도 있는 교육을 통해서 완전하게 미국이라든지 회계가 발전한 나라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분석틀을 갖추고 그런 분석을 해낼 수 있다면은 그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건 좀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보를 산출을 해내고 복식부기 체도를 넓히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가 지나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국가가 보완을 좀 해서 연계가 된다면 상호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구요. 그에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은 지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수님들이 복식부기 조직이 많이 줄었다거나 전문성을 굉장히 많이 보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물론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준비를 할 테지만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 정책결정자분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에게 만날 기회가 되시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 복식부기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심재영 교수님(사회자, 한국방송통신대)

- 다음에 이효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 이효 연구원님(발표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그러면 세 분 토론자 선생님 하구요, 또 방청석에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앞 시간에 중앙정부의 재정회계지표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렸지만 실제 어떻게 보면은 그 복식부기 회계라고 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결과를 담고 있는 그런 정보라서 이제 뭐 사업의 목표대비 결과를 본다거나 아니면 성과를 본다거나 결국은 우리가, 여기는 주로 이제 재정분석지표, 재정회계지표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지만 다른 정부쪽에서 보면은 무수한 평가지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럼 결국은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예산 쪽에서는 사업예산을 도입하고 회계 쪽에서는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게 성과관리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운영이 되어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업원가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A자치단체가 있으면 A자치단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결국엔 사업으로 표시가 되고, 그러면 그 사업이라는 것이 결국 진행해야 할 사업의 목표가 예산에 담겨지고 그리고 그 예산의 집행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재무회계지표가 나오는데 그러면 결국 사업원가라고 보면은 우리가 그러면 사업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은 사업예산원가가 있어요. 사업예산제도의 경우에 정책사업비하고 행정운영경비를 더하면 그게 예산원가가 되잖아요. 사전적으로 우리가 A라는 사업에 투입되는 원가가 얼마나 그거를 보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사후적인 회계상으로 사업원가가 얼마나 그래서 예산대비 실적을 비교해보면 원가도 똑같이 예산원가와 실적원가를 비교라는 거죠. 원가의 증감이 어떻게 되는가 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성과관리하고 연결시키게 되는데 그래서 예산구조도 바뀌어서 사업예산을 바꿨는데 우리가 만약 공공서비스를 산출한다, 복지면 복지, 교육이면 교육 이런 공공서비스를 산출해 봤으니까 그러면 그 산출물에 대해서 성과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수거를 총 100t을 했는데 그 쓰레기

수거라는 공공서비스의 성과라는 것이 뭐냐, 그럼 결국 뭐가 하면 그 쓰레기 100t을 수거하기 위해서 인력이나 장비나 아니면 여러 가지 비용들을 투입했는데 그러한 자원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했느냐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렇게 보다보면 복식부기 회계가 만약에 궁극적으로 만약 우리가 그 정부활동에 대한 성과관리를 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보면 결국은 성과관리하고 예산하고 회계가 있다고 그러면 역시 복식부기는 그 자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 하는 성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투입적인 부분, 투입비용대비 산출의 비율을 통해서 우리가 성과를 측정한다 그러면, 투입비용을 보는 건데 우리가 과거의 경우에는 현금주의 단식부기의 경우에는 이 투입비용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단식부기의 경우에 우리가 예산이라 그러면 그 예산이라는 것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발생주의 복식부기로 가게 되면 그러한 원가 속에 실제 어떤 사업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자원이 진짜 얼마나 소비가 되었는지 인력이면 인력, 장비면 장비, 그래서 이제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된다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고 그죠, 그리고 공무원 인력이 있다고 그러면 퇴직할 때 퇴직충당 그게 얼마가 그것까지 파악이 되는 거구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을 하는 경우에 차익에 대한 이자가 있으면 그 이자까지도 포함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하여간 투입이 되는 부분, 어떤 사업이면 사업에 대한, 투입에 대한 총비용 부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성과를 보다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하나인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이제 복식부기 사업을 지속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만약 고양시의 꽃 박람회를 예로 들어 그러면 그게 큰 사업이거든요. 고양시 꽃 박람회 사업의 경우에 매년 그렇게 하는데 실제 거기에 순원가가 얼마나 들어갈까, 그러면 이제 그 고양 꽃 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투입된 예산이 많이 있죠. 인력도 많이 투입 되구요. 투입되는데 그러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수수료라든가 각종 입장료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걸 빼고 나면 전체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총 들어가는 비용에다가 그 사업에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입장료를 빼면 그게 순원가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치 단체에 가서 그 꽃 박람회에 대한 순원가를 찾으려 하면 그게 이제 많은 서류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일이 계산을 하면 언뜻 이제 순원가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정품질이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나 복식부기 제도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이 제때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까 이제 행안부 송상훈 사무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저 멀리에 어떤 큰 목표지점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계속적으로 어떻게 가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심재영 교수님(사회자, 한국방송통신대)

- 다음에는 김헌 회계사님 말씀해 주세요.

○ 김헌 회계사님(발표자, 한미회계컨설팅)

- 안녕하십니까. 별로 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행안부의 송 사무관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인제, 재무제표가 인제 나왔다, 처음 나와서 이제 시작되는 단계이고 국가의 경우에 이제 나와야 되는 단계이고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시작이라 이제 가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인제, 그 아마 프로 교수님들이라 관심이, 전문가 분이 많은 만큼 복식부기 정보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많은 것이 아니냐, 애정도 많으시고 하니까 교수님들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이 분야에 대해서 정부기관에 더 애정을 가지시고 연구를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 실무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회계정보에 대한 거 아까 말씀을 좀,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제가 보기에 제가 잘못된 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송상훈 사무관님 말씀하신대로 꽤 있습니다. 작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산회계정보와, 어떤 예산정보와 회계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분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가 workshop 데이터 형을 보고 있으면 예산자산이나 회계자산에서의 세부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자체가 일종의 재무정보의 어떤 뭐라 그럴까 기본, 토대, 다져지는 과정이 아

닐까. 행안부에서는 그 이상 원가나 비용에 대한 것도 아마 근본적인 방식으로 하면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다 안정적인 데이터가 생성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하면 아까 원가성과 말씀하셨는데 교수님들 말씀 들으면 참 예전에 관리회계나 책임회계 생각도 나구요.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회계사들은 오히려 회계정보에 대해서 의외로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 생각가지고 있는데, 역으로 외부에 계신 분들은 더 오히려 이거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업에 가시면 왜 전산시스템 Erp라는 게 있는데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만 절대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회계정보만 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 없거든요. 근데 우리 현재 방향이 뭐냐면 기대를 많이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아까 그 행안부 말씀하신대로 회계정보와 이제 복식부기 지방은 되었습니다만은 금년부터 인제 아시다시피 사업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되었고 국가는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순원가부분 포함해서 말고 전체수준 말고 사업별, 분야별, 소위 책임회계단위별로 정보가 나올꺼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교수님들이 좀 더 다른 분야에 뭘 얻어주시면 보다 좋은 정보가 될 꺼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회계정보는 인프라 수준이다 아직은. 이거하고 기업도, 여담을 말씀을 드리면, 회계사가 회계정보를 가지고, 그만큼 다른 전문가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때문에 응용관점에서 시간을 두고 예산제도가 되고 사업예산이 되고 그 정보가 나오는 걸 봐 주시면 보다 의미 있게 활용되는 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가지고 있습니다.

○ 심재영 교수님(사회자, 한국방송통신대)

- 예, 감사합니다. 여기계신 다른 분들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 엄태호 교수님(토론자, 연세대)

- 아 다름이 아니구요. 제가 약간 아까 흥분이 되어 말씀을 드렸던 건 애정표현으로 그런 겁니다. 이게 실제 무서워서 말씀을 못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로 많이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제가 지금 이 수준이 안 된다는, 절대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구요. 어떻게 본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감정이입을 시켜서 여러분들과 같이 무언가를 한다는 생각으로 이걸 어떻게 가야 될 건가라는 것 때문에 제가 그런 거지 결코 여러분들이 하신 것을 폄하하거나 아니면 이 상태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지금 이 정도가 무언가 나오게 된다는 것은요. 이때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셔서 여기까지 정말 십여 년에 걸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순간이 굉장히 감동적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이해관계를 조정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안 오시는 수많은 분들이 희생하셔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안 오신 분들도 계시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 뭉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 심재영 교수님(사회자, 한국방송통신대)

-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 토론을 듣고 있다가 문득 생각이 나는 구절이 있었는데, 제가 외국 논문을 읽다가 보니까 어떤 미국 교수가 어디 발표에서 썼던 그 글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인용했던 게 정부회계를 얘기하면서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에라스무스가 했던 얘기, 많이 아시는 얘기지만 In the kingdom of the blind, the one-eyed is the king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회계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지금 눈 먼 사람들이 사는 하나의 왕국과 비슷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부회계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외눈박이입니다. 교수들도 사실 회계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은 기업회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정부회계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겨우 정부에서는 외눈박이 정도가 되는 거고, 또 행정학을 하시는 분이 그 회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외눈박이이기 때문에 자체로는 상당히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회계기준을 만드는 양대 영역이 미국의 Gsb나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국제회계사연맹의 국제공공 회계기준이 있는데 미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하지만은 이쪽 그 국제

공공회계부분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합친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준은 사실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을 많이 따라서 사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회계지표를 만들 때 상당히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회계기준에 따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기업체의 그런 지표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얘기하면서 이 순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 쪽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도 정부회계에 관심을 가진 게 1970년대쯤 와서인 것 같습니다. 1974년에 미국 뉴욕시시가 재정위기에 빠져가지고 부도사태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가 개입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에서 정부회계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그 당시 미국회계학회에서 정부회계쪽 사이드를 연구보고서를 내기 시작하는데 그때 정부회계 목적을 지금보다 아주 쉽게, 단순하게 하나는 management control이고 하나는 accountability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굉장히 명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Gsb에서 나온 목표보다도 더 명쾌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management controlling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시가 되는데 대개 접근방식이 미국에서도 초기에는 정부회계 할 때는 accountability, 1920년대에 무슨 부정 스캔들 이런 거 때문에 accountability에 굉장히 초점을 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4년 이후에는 management control 쪽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시작되었는지가 사실 애매합니다. 애매하다보니까 제가 보기에선 상당히 accountability에 초점을 맞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시작할 때는 이게 사실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지 이게 주민들이 이런 정보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쪽에 초점을 뒀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게 어디까지가 기업회계와 다른 정부회계측면이기 때문에 accountability가 굉장히 중시가 됩니다. 그런데 accountability에 대한지표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accountability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는 사실 제가 보기에선 행안부에서 짧은 기간 내에 이 정도까지 진척을 이뤘다는 것을 저는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행안부에서 참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협조를 하셔가지고 상당한 우리가 진전을 이루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씩하나씩 다져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중앙정부의 경우에, 제가 한 달 국고국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2009년에 실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되어서 과연 실시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초기에 지방정부가, 이제 먼저 지방정부회계가 발전하고 중앙정부도 되었는데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러한 지금까지 우리가 정보를 생산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활용하는 측면까지가 또 이렇게 논의하게 된 것을 정말 커다란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토론에 참석해주신 발표자 선생님들, 그 다음에 토론자로 참석하신 교수님들 감사드리고 방청석에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토론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